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대기업 축산업 진출 허용 움직임 양계, 양돈업계 강력 반발

정부는 축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춰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토록 하기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규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현행 축산법에는 일정규모(모돈 5백두 양돈업, 5만수 이상 양계업) 이상 축산업에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축산법개정을 통해 축산업 진입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민승규 농림수산물부 제1차관은 “현행대로 대기업 축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친환경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축산업 대기업 진출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술 및 경영혁신, 계열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유입이 필요하다”며 “영세적인 축산 규모로는 녹색성장, 환경·식수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은 농림수산물부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향후 농정의 기본방향이 될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간의 농업분야 투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즉,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규제를 철폐, 친환경 축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자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축산업 진출방안이 정부로부터 발표되자 축산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채란농가들은 대기업들이 축산업에 진출하면 농가들의 설자리는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대기업들의 소작농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번 조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중지를 모으고 있다. 채란인들은 대기업이 채란업에 뛰어들면 사육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장악당하여 일반 농가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대부분의 농가는 도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경제적인 논리 앞에 채란인 및 관련 축산인들은 제2의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본회에서조차 즉시 대기업 진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농단협 등 관련단체들과 연계하여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대기업이 축산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지난 1989년부터이다.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 농업분야 지원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대기업중 삼성이

현재 애버랜드 지역에 '자연농원'이라는 대규모 양돈장을 1973년부터 운영해 오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기업진출 움직임은 계속되어 왔지만 그 때마다 축산농가들의 반발에 막혀 뜻을 펼치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이미 육우와 낙농업은 이미 대기업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양돈과 양계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없으며,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민원발생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가들의 필사적인 반발로 인해 자칫 일촉즉발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다. 정부가 진정 축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국내 양계, 양돈 농가의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파산으로 치닫는 축산업을 지켜내는 정책을 유도해 가길 기대해 본다.

산란계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 의무자조금 순조로운 진행

산란계 의무자조금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지난 16일 경기도와 경북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총 49개 선거구에서 실시, 뜨거운 열기속에 7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면서 순조롭게 끝났다. 총 80명을 선출할 수 있는 정원수를 감안한다면 95% 이상의 높은 비율로 대의원들이 선출된 셈이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를 내지 않은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47개 선거구에서 치러졌는데 모든 지역에서 선거인 50% 이상, 사육수수 2/3 이상을 충족하면서 대부분 당선자를 배출하였고 후보를 중도 사퇴한 공주를 제외한 총 77명이 대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화성, 곡성, 순천 등의 지역에서는 선거기간중 뜻하지 않은 전남지역의 저병원성 시 항체확인 보도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선거에 차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투표권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가장 대의원을 많이 배출한 지역은 4선거구인 포천과 가평으로 총 5명의 대의원이 배출되었고 유일하게 경합을 벌인 곳은 32번 선거구인 경주로 5명 후보가 경합을 벌여 4명의 대의원이 선출되는 등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특히 10번 선거구인 화성, 의왕, 오산지역은 도시화로 인해 산란계 농가들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면서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산란계 의무자조금을 염원하는 지역 축협 및 육계지부의 협조로 순조롭게 끝났다.

투표기간중 본회 이준동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들이 전국의 선거구를 돌면서 지원사격을 한 것도 이번 대의원 선거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산란계의무자조금공동준비위원회는 대의원 선거가 순조롭게 끝나면서 단시일내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늦어도 3월로 예상된 대의원 총회를 통해 자조금거출 여부 및 수납기관 확정, 대의원총 관리위원 선출 등 자조금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골격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대의원이 무리없이 선출된 것에 비춰볼 때 향후 자조금 추진에 청신호가 기대되면서 자조금

실시 여부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조금 거출에 있어서 수납기관으로 지정된 노계도계장과의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관건으로 다가서고 있다. 현재 전국의 3~4개 도계장이 전체 처리비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나머지 소규모 도계처리장들의 현황파악을 통해 모든 산란계가 동참할 수 있는 의무 자조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자조금이 이루어지더라도 생산자단체와 연계된 자조금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자조금법 개정 움직임을 보면 자조금 사업과 관련 생산자 단체들과의 연계성을 단절시키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인 만큼 관련 단체들과 자조금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양계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한다.

저병원성(H5) A 발생 고병원성으로의 변이 막아야 한다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A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H5형 저병원성 A가 발생, 해당 농장의 닭들을 살처분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동남아지역중 최근 베트남과 중국에서는 연이어 발생사실이 보도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 2년을 주기로 발생양상을 보였던 국내에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H5형 A 항체양성 확인농장들은 각각 토종닭 100수(순천), 1,700수(곡성), 18,300수(보성), 10,000수(익산), 42,000수(군산)를 기르는 곳으로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H5 항체양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병원성 A의 경우 농가가 자율적으로 방역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수 있는 H5형 및 H7형 A의 경우 항체만 검출되더라도 고병원성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A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 닭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매몰하였다.

전문가들은 언제든지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수 있는 H5와 H7형 바이러스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저병원성 A는 3종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고 국내에서 나타나는 H9N2 바이러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백신이 허용되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문제는 전염성이 없는 H9형이 아닌 H5/H7형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국내에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저병원성에서 고병원성으로 전이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변이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더욱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A 재발위험이 높은 22개 집중관리지역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매주 임상예찰과 철새 분변검사, 오리 및 닭에 대한 예찰검사 등 A 상시방역체계를 확고히 구축 운영함으로써 국내에 A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육농가들도 차단방역은 물론 이상계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방역당국에 알려주어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양계**